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2/11/2 통권 1595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CEO는 자연을 듣는다

###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

상장 - 대형 비상장 - 비상장회사 간 회계규정 비교  
(금융위원회 자료)

###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종업원에게 대여한 학자금이나 일시적 가불금은 인정이자 계산하지 아니함
-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질의(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비사업용 토지)
-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마련
-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안내
-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 대폭 축소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 요건 완화 등 규제 대폭 완화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종전 사업자의 임금채무 지급조건으로 면허 취득 시 해당 채무부담 지급액은 영업권에 해당함

(p.14)

###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 〈연간예상 손익과 과세소득 및 납부세금 추정 계산주의점 10가지〉

1. 예상매출 : 판매량 추세 × 평균 판매단가로 품목별 총 예상 매출액을 파악함. 당기와 후기 기간 손익구분이 중요함
2. 매출원가 : 매입량 추정 × 평균 매입단가로 항목별 총 예상매출원가 추정함
3. 판관비 분석 : 변동비(원재료비 등, 판매수수료 등)와 고정비(고정 인건비, 감가상각비, 임차료 등)의 항목별 구분계산, 인건비(불법체류 외국인의 소득지급문제)
4. 감가상각비 : 제조원가 성격(기말재고가액 비율배부액은 당기비용 아님)과 판매관리비 성격의 구분, 총당금의 합리적 계산 설정
5. 퇴직급여 : 매년, 매월의 인건비(변동+고정비) 이외에 퇴직급여비용 추정(내부 추정이거나 DC형 가입), 4대보험 비적용자의 퇴직금 문제도 감안
6. 대손상각비 :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 판단, 평균대손추정비율 반영, 장기미회수채권은 전액손실반영
7. 손상차손익 : 재고자산, 금융자산, 투자자산, 관계회사 주식, 영업권자산 등의 당기손실감액요인 반영
8. 금융수익 : 보유한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수익 등(이자율, 이자기간 반영)
9. 금융비용 : 장단기 차입금 이자계상, 회사채, 전환사채의 매월이자 추정, 할인발행차액의 감가상각비 반영
10. 영업외손익 : 외화환산 평가손익, 각종 자산 · 부채의 손익반영, 세전순이익 × 법인세율로 당기 법인세 추정함.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95호 / 주간 44호

2022. 11. 02. (수)

· 발 행 인 : 이 윤 언  
· 제 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임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정전략	연간예상손익과 과세소득 및 납부세금 추정 계산 주의점 10가지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상장 - 대형 비상장 - 비상장회사 간 회계규정 비교 (금융위원회 자료)	2
C E O 에 세 이	CEO는 자연을 듣는다	3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외상채권 및 미수금 대손처리 - 부가세 초과 입금 회계처리 문의 - 당사 해외법인에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하다가 퇴직 처리 후 당사 해외 법인에 자문 계약을 맺은 자의 과세여부 - 부가세 신고 시 구매전용카드매출에 대한 신고서 작성 여부	5 6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종업원에게 대여한 학자금이나 일시적 가불금은 인정이자 계산하지 아니함	7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연도별 소득세·법인세 현황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변화	9 10
직 장 인 Survival	타인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12가지 ②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운송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은 영업권에 해당함 (사전법규법안-428, 2022.04.13) -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당해 조합을 통하 여 취득한 주식을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로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 은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사전법규법안-1529, 2022.01.10)	12 13
세 정 뉴 스 와 해 설	이자·배당소득 연 336만원 넘으면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14
마케팅 Tax consulting	중전 사업자의 임금채무 지급조건으로 면허취득시 해당 채무부담 지 급액은 영업권에 해당함	12
세 무 정 보	-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질의(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비사업용 토지)	15
회 계 정 보	-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마련 -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안내	31 38
노 무 정 보	-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 대폭 축소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 요건 완화 등 규제 대폭 완화	41 46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를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 준·재정환율	30

# 상장 - 대형 비상장 - 비상장회사 간 회계규정 비교(금융위원회 자료 발췌)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 양수 컨설팅  
(829-7575)

구분		상장회사 (2500여개)	자산1천억원(5천억원 개선 예정) 이상 비상장회사 (4천여개)	기타 비상장회사 (27,000여개)
적용 회계기준		K-IFRS	K-GAAP	K-GAAP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		X
	외부감사인 인증 수준	감사	검토('감사'보다 낮은 강도)	X
주기적 지정제		○		X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상장사 감사인 등록법인 한정)	회계법인	회계법인, 감사반
회계법인 동일이사 연속감사 제한		연속 3개년까지 감사 가능		연속 5개년까지 감사 가능
3년 연속 동일 감사인 선임 의무		○		X
감사인선임위원회 설치 의무		감사위원회가 없는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임		X

# CEO는 자연을 듣는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CEO의 지도력은 변설보다 경청에서 나온다. 그런데 경청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바삐 돌아가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각 방면의 소리를 잘 듣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모든 소리를 현실적으로 만족스럽게 들을 시간도 충분치 않거니와 인간으로서 한계도 있다. 더욱이 CEO에게 올라올 소리라면 다듬어져서 모두 그럴싸하게 들린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옥인지 돌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고명한 이름을 떨쳤던 노학자가 복마전이라는 서울을 경영하는 CEO, 그것도 민선시장으로 뽑혀 앉았다가 웃음거리가 된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이해관계가 단순한 어린 대학생들 앞에서야 먹혀들었던 알량한 허명으로 목에 힘이 들어간 때문이다. 또는 학문이 남의 나라 것으로 우리 현실에는 헛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4,50대의 노련한 관료들의 포장된 소리를 구별치 못하고 결국 명청했던 것이다. 더구나 고도의 현실 정치 산물로 꼭두각시처럼 당선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순진한 콤플렉스 때문이다. 그 후 행적을 보면 짐작이 간다. 현실은 교과서처럼 그리 단순치 않다. 그만큼 철저한 겸손이 필요하다.

## 무상심을 지녀야 경청 가능

노자는 일찍이 리더의 약하고 유연한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진정한 지도자는 고정된 마음이 없다. 즉, 무상심(無常心)이다. 오로지 백성의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삼는다.”

목이 뾰뚱한 관료와 정치지도자 그리고 기업의 CEO들이 명심해야 할 귀한 말씀이다. 명경지수(明鏡止水). 밝은 거울과 잔잔한 물이라는 뜻이다. 마음이 가장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를 가리킨다.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에 왕태(王駘)라는 선비가 있었다. 그를 따르는 제자가 많았다. 그 점을

불만스럽게 여긴 공자의 제자 상계(常季)가 스승에게 말했다.

“그는 서 있어도 가르치지 않고 앉아 있어도 대화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빈 마음으로 그를 찾아갔다가 뭔가 얻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자가 답했다. “원래 ‘말 없는 가르침’이란 게 있느니라. 속으로 완성된 마음의 소유자는 그것이 가능하다. 흐르는 물을 들여다보면 자기 얼굴을 볼 수 있겠느냐? ‘명경지수라야만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다.’ 그분에게 사람이 꺾는 이유이니라.”

## 명경지수해야 세상 흐름 들어

아무리 세상이 소란하고 바빠 돌아가도 CEO는 명경지수해야 한다. 그래야 세상 흐름을 듣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대의 함성을 들어야 한다. 얼마 전 대구 지하철의 화재사건이 있었다. 완전히 안전에 무방비 상태였다. 그것은 무책임과 부조리 그리고 사회적 부패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국민여론 조사에 10명 중 4명은 이민 가고 싶다는 보도도 있었다. 국가경영자는 이 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치유해야 한다. 그와 같이 기업의 CEO는 종업원과 고객의 소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바빠 돌아갈수록 낮아지고 맑은 거울이 되어야 한다. 노조의 함성도 그래야 잦아들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순풍에 배 흐르듯 경영이 순조롭게 된다. 그럴 때라도 늘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된다. 하버드대 코터 교수가 지적한 개혁을 성공으로 이끄는 충고를 새겨보자.

“개혁을 성공하려면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일찍 삼페인을 터트리면 만사 끝장이다.”

또 대자연의 숨소리도 잘 들어야 한다. 이제 개발의 망치소리 못지 않게 바람소리와 물소리 그리고 꽃봉우리 터지는 소리가 중요하다. 자연을 아끼고 가꾸어야 자연이 보답한다. 환경라운드를 규제나 잔소리로 인식하는 것은 이제 어리석음이다.

## 외상채권 및 미수금 대손처리

- Q**
1. 외상채권 중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별도 증빙없이 대손 및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2019년 이전 거래에 대한 외상매출금도 가능한지요?
  2. 해외외상채권도 대손 가능한가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외\*\*\*
- A**
1. 외상채권도 대손 및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민법상 단기소멸시효는 3년)이 완성되는 시점에 처리하게 되며 대손처리를 하려면 회수노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 해외 채권도 대손요건이 충족되면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 부가세 초과 입금 회계처리 문의

- Q**
- 업체에 운송비를 대납하고, 후에 청구하여 받기로 했는데,  
업체에서 운송비 대납금 처리를 제품 발주처리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운송비 + 부가세10% 를 초과하여 입금받게 되는데 초과되는 부가세 10% 금액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면 될까요?  
그냥 하기와 같이 잡이익 처리해도 될까요?  
EX) 운송비 대납시 : 미수금 100 / 보통예금 100  
운송비 입금받을 시 : 보통예금 110 / 미수금 100  
잡이익 10?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A**
- 운송비대납시 귀사가 부가가치세액을 대납하지 않는데, 회수시 부가가치세액만큼을 받는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잡수입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 당사 해외법인에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하다가 퇴직 처리 후 당사 해외법인에 자문 계약을 맺은 자의 과세여부

**Q** 당사 소속 근로자가 해외법인에서 근로를 하다가 퇴직 후 다시 당사 해외법인에서 자문 계약을 맺고 일을 한다면 과세여부가 궁금합니다.

1.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지의 문의.
2.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

**A** 귀사의 소속 근로자가 퇴직후 해외 현지법인과 자문계약 체결후 다시 일을 하는 경우,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통상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자산상태 등을 보아 국내에 다시 귀국할 것이 확실한 경우라면 거주자에 해당하며, 거주자의 경우는 자문계약 체결하고 용역제공받고 대가 지급하면 사업소득이 타당합니다.

## 부가세 신고 시 구매전용카드매출에 대한 신고서 작성 여부

**Q** 당사의 매출 중에 구매전용카드매출로 발생한 금액이 5백만원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있는 상황인데  
부가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있음에도 구매전용카드매출에 대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갑)의 서식에 별도로 매출금액을 기재해 주어야 하는건  
가요?

기재가 누락되었을 시 별도의 가산세가 있나요?

**A** 구매전용카드매출금액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분으로 신용반영되었  
다면 신용카드매출에 반영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종업원에게 대여한 학자금이나 월급범위 일시적 가불금은 인정이자 계산하지 않음

상담실 백종훈 차장

대여금은 대여 상대방에 따라 일반대여금과 주주·임원·종업원대여금 또는 관계회사 대여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회계상으로는 자금대여의 상대방이 누구냐를 불문하고 약정에 따라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면 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상이나 저리의 약정이자율로 거래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고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정상적으로 과세하고 소득 귀속자에게 과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라도 일시적 급여 가불이나 학자금 대여액 등은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종업원에게 학자금 대여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상당액과 법인이 계상한 이자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저율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받아 세법이 정하는 인정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이나 인정이자율과의 차이 상당액을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반영한다. 이때 인정이자 상당액은 법인의 익금산입은 물론 금전을 대여받은 직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받은 직원의 상여로 처분함으로써 직원의 개인 근로소득으로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업원에게 자금대여시 인정이자계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열거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우리스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 국민연금법에 의해 직원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직원의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일시적인 급여의 가불금,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나 학자금의 대여액, 중소기업 근무직원에게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등은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

외하고 있다(법인세법 규칙 §44).

그외의 종업원에 대한 일체의 장기저리나 무이자 자금대여액은 인정이자율 계산해야 한다.

인정이자금액은  $\text{가지급금} \times (\text{인정이자율} - \text{실질대여금리}) / 365 (\text{윤년 } 366)$ 로 계산하는데, 인정이자율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적용한다.

법인에 차입한 금액 등이 없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2022년 귀속분에 대한 당좌대출이자율은 4.6%이다.

### **무주택종업원의 주택구입 대여금은 인정이자율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때는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및 임차에 소요된 자금으로서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현재는 종업원에게 주택구입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시가에 상당하는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시가이다.

다만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구입이나 임차를 위한 대여금에 대해서는 높은 금리로 차입했더라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과 대여금리와의 차액만을 인정이자로 계산한다. 즉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차입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법인세법 §89③).

#### **◆ 인정이자계산에서 제외되는 금전의 대여 ◆**

- ① 미지급소득(배당소득,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규칙§44, 1호)
- ②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국외 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에게 여비·급료·기타 비용을 가지급한 금액 (규칙§44, 2호)
- ③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가지급한 금액 (규칙§44, 3호)
- ④ 국민연금법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규칙§44, 4호)
- ⑤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규칙§44, 5호)
- ⑥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안의 일시적 급료 가불금(규칙§44, 6호)
- ⑦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포함)의 대여액(규칙§44, 7호)
- ⑧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규칙§44, 8호)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연도별 소득세 · 법인세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소득세	근로 소득세	법인세	국세	소득세/ 국세	근소득/ 국세	법인세/ 국세
2008	36.4	15.6	39.2	167.3	21.8	9.3	23.4
2017	75.1	34.0	59.2	265.4	28.3	12.8	22.3
2021	114.1	47.2	70.4	344.1	33.2	13.7	20.5
연평균 증가율 (%, %p)	08-17	6.5	6.6	3.3	4.1	6.5	△2.9
	08-21	8.4	9.0	4.7	5.3	11.4	△1.1



### 가계 · 기업의 소득 및 소득세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기업소득	기업 소득세	가계소득	가계 소득세	법인세/ 기업소득	소득세/ 가계소득
2008	287.5	41.2	714.8	36.1	14.3	5.1
2017	498.4	62.0	1105.7	72.6	12.4	6.6
2021	525.8	76.7	1281.3	114.5	14.6	8.9
연평균 증가율 (%, %p)	08-17	6.5	6.6	3.3	4.1	6.5
	08-21	8.4	9.0	4.7	5.3	11.4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변화

개정	내용
1994년 12월 31일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
2002년 10월 1일	1기 신도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
2003년 11월 20일	1기 신도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
2012년 6월 29일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2017년 9월 19일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



##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 변화

개정	내용
1998년 4월 1일	일시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 1년 → 2년 연장
2002년 3월 30일	일시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 2년 → 1년 단축
2008년 11월 28일	일시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 1년 → 2년 연장
2012년 6월 29일	일시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 2년 → 3년 연장
2017년 9월 19일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
2018년 9월 14일	* 조정대상지역 일시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 3년 → 2년 단축
2019년 12월 16일	* 조정대상지역 일시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 2년 → 1년 단축
2021년 1월 1일	1세대1주택 판단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2022년 5월 10일	조정대상지역 일시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 1년 → 2년 연장

\* 기한 내 이사 · 전입신고해야 비과세



## 타인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12가지 ②

7. 먼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어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나를 상대방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우선 먼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준 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해야 한다.

8. 푸념하지 마라.

이것은 무엇보다도 당신을 실패자처럼 보이게 만든다.

9. 당신의 주장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마라.

질서 정연하게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당신 말을 듣는 사람들을 이끌어라.

당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라.

10. 말하기보다 먼저 들어야 하는 이유

다른 사람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상대방과 나를 하나의 끈으로 묶어줄 것이다.

11. 자신을 설득 상대라고 가정한다.

의견 조율을 할 때 설득 당하는 입장에서 자신이 설득할 내용을 들어본다.

스스로 납득할 수 없다면 이미 그 방법은 틀린 것이다.

12. 서두르지 마라.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성급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면

무리한 전략을 세워 좋지 못한 결과를 거두게 된다.

# 최 신 판 례 예 규

## Marketing Tax consulting

종전 사업자의 임금채무 지급조건으로 면허 취득시 해당 채무부담 지급액은 영업권에 해당함

### 운송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은 영업권에 해당함

사전법규법인-428, 2022.04.13

#### 질 의

- \*\*남도는 기존 운송사업자가 경영난에 따른 누적된 부채와 임금체불 등으로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선정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 사업자 선정 공모시, 기존 운송사업자의 퇴직근로자 체불임금 해소방안 제시를 조건으로 사업자 선정 평가를 진행함
- 2022.\*.\*. 질의법인은 당사자와 협의하여 체당금\*을 제외한 체불임금 전체금액의 \*\*%를 지급하기로 합의함
- \*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한다
- 2022.\*.\*\*. 질의법인은 해당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로 최종 선정됨

#### 질의

-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의 세무처리

#### 회 신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면허를 득하면서 운행노선은 기존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던 노선을 인수하되 기존 운송사업자

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채무의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득한 경우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신탁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자본거래-6600, 2021.12.31

#### 질 의

- 질의법인인 부동산 신탁회사와 함께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21.5.26.)받아,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고 거래하는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
- 부동산 소유자(이하 "위탁자")는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부동산을 관리, 처분하는 것을 위임하는 부동산 관리·처분신탁 계약을 체결
- 질의법인은 플랫폼에서 투자자 공모, 청약을 진행하고, 투자자들은 당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1개의 증권회사("계좌관리기관")의 연계 계좌를 당사의 플랫폼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
- 투자자 모집이 완료되면, 수탁자는 해당 부동산 신탁 수익권을 전자증권법에 따라 등록기관(증권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여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
- 위탁자는 모집된 투자금을 지급받고,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신탁등기
- 투자자들은 "수익자"로서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신탁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임대수익 및 매각이익)"을 지급

받는 수익권을 취득하게 됨

- 질의법인은 전자등록된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디지털화된 전자증서(DABS)를 발행하고, 당사의 거래 플랫폼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주식처럼 간편하게 투자하고 매매(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질의

-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이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디지털화된 전자증서(일명 "DABS") 방식으로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 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신탁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로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사전법규법인-1529, 2022.01.10

#### 질 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인 내국법인이 투자조합의 해산으로 해당 투자조합이 보유 중인 창업자의 주식을 분배받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해당

차익을 내국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로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2, 2022.01.12

#### 질 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조합원분양 외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하거나, 조합원이 부담할 분담금 등에 충당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여부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이자·배당소득 연 336만원 넘으면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넘어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앞으로는 336만원만 넘으면 부과된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보험료 대상을 늘리기 위해 현재 보험료 부과 대상을 연간 이자·배당소득 336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5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료는 현재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구간에만 부과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건보 가입자의 최저보험료(월 1만9500원) 기준선을 연소득 336만원(과세소득 기준)으로 잡고 있다.

보건당국은 내년에 연구용역과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를 통해 분리과세 금융소득 부과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을 듣고, 내후년에 국민참여위원회 및 국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후 재정 영향 분석 결과 등을 반영해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는 원래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만 물렸고, 건보 가입자가 주택임대 또는 금융투자 소득이 있어도 연간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근로사업소득 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2020년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연 1000만원 이상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했다.

### 국세청,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작업 착수

국세청은 퇴임공무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공직퇴임 세무사의 수임제한 범위를 규정한 '세무사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개정(양도사무처리규정 제2장 제10조)를 비롯해 '수정신고서 등의 청구의 처리'개정(양도사무처리규정 제2장 제11조) 등이다.

우선,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개정(안)은 경정청구서 처

리시 '세무사법시행령'에 따른 공직퇴임 세무사 수임제한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해 제한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다.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3조, 제26조에 따른 징계요구와 징계요건 조사보고 등이다.

'수정신고서 등의 청구의 처리' 개정(안)은 기한 후 신고서 처리시 '세무사법시행령'에 따른 공직퇴임 세무사 수임제한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해 제한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때 기한 후 신고의 수정신고서도 포함한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관계자는 "오는 11월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상위 1% 기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금특례 98% 차지

지난해 6000억원에 달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원의 98%를 상위 1% 기업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4일 지난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전체 공제세액 6009억원 중 5869억원이 104개 상위 1% 기업에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들은 1곳 당 평균 56억원의 공제를 받은 것에 비해 나머지 99% 기업은 1곳 당 7000만원 수준의 공제를 받았다.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원자력·사물인터넷·바이오 헬스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은 물론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에서도 전체 공제세액 2조334억원 중 절반인 1조211억원은 상위 1% 기업이 차지했다.

국세청 측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283개 가운데 중견, 중소기업은 46개이며, 대기업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최저한세율 적용을 받지 않는 등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연구개발비 지출이 규모가 큰 기업이 많다고 할지라도, 공제 혜택을 상위 1% 기업이 썬뜯듯 모두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중소·중견기업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비사업용 토지)

- 국세청, 2022. 10

- 
- (발간배경)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세법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 이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매월 안내하고, 연도말에 이를 모은 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 (구성내용)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① 사실관계 ② 질의내용 ③ 답변내용 ④ 관련 해석 ⑤ 참고자료 순으로
    - ▶ 사례별로 그림, 도표를 이용하여 구성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로 표현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아울러, 세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판정흐름도와 최신 해석사례를 다양하게 첨부하여 국민들의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이용방법)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하여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제공하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 \* [www.nts.go.kr](http://www.nts.go.kr) 《국세신고안내》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메뉴 선택
    - ▶ 아울러, 국민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로 「유튜브」 동영상도 제작하여 게시할 예정입니다.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1 발간 배경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 ▶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시리즈로 안내하고 연도말에 이를 모은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에 발간된 책자, 유권해석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 이에, 국민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를 사용하여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내용을 사례별로 쉽게 풀어서 작성하였습니다.

## 2 주요 구성내용

- 올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국민들이 양도소득세 법령 등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 국민들이 자주 묻는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포함) ② 다주택자 중과제도 ③ 조합원입주권·분양권 ④ 장기임대주택 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위주로 매월 제작하며,
  - ▶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내용을 사례별로 그림, 도표 등을 이용하여 알기 쉽게 표현하였습니다.
- 구성은 ① 다양한 실제 사례별 사실관계 ②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 질의내용 ③ 국세청의 답변내용 ④ 관련 해석 ⑤ 비과세 판정흐름도 등 참고자료 순으로 하여
  - ▶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특히, 세무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형별 판정흐름도를 추가하고
  - ▶ 안내한 사례와 동일·유사한 상황에서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최신 해석사례를 다양하게 함께 수록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 3 이용방법

- 국세청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국세청 누리집의 별도 코너를 통해 매월 안내할 예정이며, 접근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4 향후계획

- 국세청은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고 있으며,
  - ▶ 지난해 주택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주택과 세금('21년 3월)」 책자를 발간하고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21년 6월)」을 제작·배포한 바 있습니다.
- 올해에도 이러한 납세서비스 지원의 일환으로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제작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연도말에 이를 모은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며,
  - ▶ 국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동영상도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 아울러, 국민들의 호응이 높았던 「주택과 세금」책자는 개정세법을 반영하는 등 더욱 알차고 새롭게 구성하여 「2022 주택과 세금」으로 3월 중 다시 발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
  - ▶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

### 다른 소득이 있는 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 박대환씨는 '22.12월 직접 경작하던 A농지를 양도할 예정임

- 박대환씨는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함
  - ① '08~'12년 : 5년 (총급여 3천700만원 미만)
  - ② '13~'22년 : 10년 (총급여 3천700만원 이상)

Q.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 직장을 다니면서 농사를 지은 경우, A농지 양도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따라서, 귀하는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제외할 경우 자경 기간이 5년이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경작기간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득금액 요건은 아래 참고

### 〈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한도 〉

당해 연도	5개 과세기간
1억원	2억원

### 참고자료(경작기간 계산에서 제외하는 경우)

구 분	금 액	비 고
총급여액 (소득법 §20②)	3천 700만원*	-
사업소득금액 (소득법 §19②)	3천 700만원*	①, ②, ③은 제외
총수입금액** (소득법 §24①) (소득령 §208⑤)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 1.5억원 - 서비스업 등 → 0.75억원	① 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법 §19①) 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법 §45②) ③ 농가부업소득(소득령 §9)

\* 3천 700만원 요건은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총수입금액 기준은 2020.2.11.이 속한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2020년 귀속)

### 해석사례 1.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3(2016.05.16.)

- 거주자가 「농지법」 제6조에 따라 1,000㎡ 미만의 주말·체험농장을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나 재촌·자경 기간 중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에 따라 그 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어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해석사례 2. 서면-2016-부동산-6044(2017.04.06.)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에 따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농지가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자경농

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김국세씨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22.1월 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사실상 지목을 변경함

- 김국세씨는 '22.11월 A대지를 양도할 예정임

Q.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 저는 30년 이상 농사를 지었는데 감면받을 수 없나요?

A.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A대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해석사례 1. 재산46014-786(2000.06.28.)

◎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 규정을 배제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 해석사례 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3(2006.09.28.)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김제시에서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민국씨는 정읍시로 이전하여 축산업을 계속할 계획임

- 이민국씨는 김제시에 있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22.11월 양도할 예정

Q. 8년 이상 축산업에 사용한 축사와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 제 경우 A축사용지 양도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8년 이상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축산업에 이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는 축산업 폐업이 아닌 축사시설 이전의 사유로 A축사용지를 양도할 예정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 한도 〉

당해연도	5개 과세기간
1억원	2억원

### 해석사례 1. 부동산납세과-184(2013.12.04.)

● 축사용지의 일부만 양도하고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해석사례 2.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489(2021.10.27.)

● 부부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당해 부부 중 일방만 축산업등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따른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 해석사례 3.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60(2016.06.23.)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따른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

로서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3년간 임차인이 축산에 사용한 후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현행 : 2022년 12월 31일까지

#### 4 휴경 기간이 있는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은?

##### ◎ 최성실씨는 '23.1월 A농지를 양도할 예정임

- ① A농지는 시지역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
- ② 소유기간 : 10년, 경작기간 : 7년

Q. 제 경우 직접 경작하던 A농지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3년간 휴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 A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요?

A. 농지 소유자가 농지 소유기간 중 일정 기간(아래 참조) 동안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A농지 소유기간 중 60% 이상(10년 중 7년)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A농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닙니다.

기간	Check
.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X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X
. 소유기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인 기간	O

\* 5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경우 경작한 기간이 위 ① ~ ③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사업용 토지 세율 : 기본세율 + 10%(다음 페이지 참고)

#### 비사업용 토지 판정 관련 기간기준(소득령 §168의6)

소유기간	비사업용 토지 아님 (토지 소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이상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소유기간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인 기간
3년~5년	소유기간 중 3년 이상의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소유기간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의 기간
3년 미만	소유기간 중 2년 이상의 기간
	소유기간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인 기간

### 기본세율 및 비사업용 세율(소득법 §104)

과세표준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16%	-
4,600만원 이하	15%	2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3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4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4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50%	2,540만원
10억원 이하	42%	5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55%	6,540만원

## 5

###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는지?

㉠ 강친절씨는 '15.8월 아버지가 직접 경작한 A농지를 상속 받음

- 강친절씨는 '23.10월 A농지를 양도할 예정임

- ❶ A농지는 양도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소재
- ❷ 아버지 : A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
- ❸ 아 들 : 서울에 근무하고 있어 A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음

Q. 저는 A농지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 제 경우 A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없지만 아버지가 장기간 직접 경작하였는데, 이 경우 A농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A.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 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A농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닙니다.

\* 참고 :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상속농지를, 상속인이 양도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상속한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시	상속한날로부터 3년 지나 양도시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아도 감면 가능	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감면 가능

#### 해석사례 1. 재산세과-378(2009.02.03.)

- 귀 질의 경우, 200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1의2 규정에 따라 직계존속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양도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안의 농지 제외】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해석사례 2. 부동산거래관리과-23 (2011.01.11.)

-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결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소유한 임야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1의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안의 토지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상속받은 임야가 농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 현행 : 30킬로미터 이내

6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도시지역			도시지역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		
3배*	5배		10배

\* '22.1.1. 이후 양도분부터

**해석사례 1. 부동산거래관리과-345(2012.07.05.)**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인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9(2007.04.18.)**

-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 7호 및 제104조의3제1항제5호, 같은 법 부칙 (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7

## 재개발사업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 장세정씨가 소유한 A토지 소재지는 '22.1월 재개발사업 인정 고시됨

- 장세정씨는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A토지를 양도할 예정임

Q. 저는 A토지를 부득이하게 재개발사업으로 양도하게 되었는데

-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없나요?

A. 재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A토지 양도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입니다

\* 현금으로 양도 대가를 받은 경우 감면율은 10% (다음 페이지 참고)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조특법 §77)

구분		감면율
현금		10%
채권		15%
만기보상 채권	3년 이상	30%
	5년 이상	40%

### 해석사례 1.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82 (2015.06.04.)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토지(나대지)를 판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 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같은 영 제168조의6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며,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 현행 : '23.12.31. 이전 양도분

### 해석사례 2.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96(2017.10.25.)

- 토지소유자의 토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것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8

###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 ◎ 김대한씨는 A일반주택과 B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김대한씨는 '22.9월 A일반주택을 양도하고 '24.6월 B농어촌주택을 양도할 예정

Q. 저는 농어촌주택 특례로 A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 이후 B농어촌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A일반주택 양도 후 다시 2년 이상 보유



해야 되나요?

- A.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남은 농어촌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입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B농어촌주택을 4년 이상(' 20.5월~' 24.6월) 보유하였 으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농어촌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기산일 해석 변경(22.8.25.) 〉

기존해석(보유기간 재기산 O)	→	변경해석(보유기간 재기산 X)
A일반주택 양도 후 2년 이상 B농어촌주택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변경)	B농어촌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 농어촌주택의 요건(조특법§99의4)

- 1세대가 ' 03.8.1.~' 2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아래 ①~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 ① 취득당시 다음 ㉠ ~ ㉡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읍·면 또는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 지역에 속한 동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 ㉠ 수도권 지역(단, 접경지역 중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제외)
    - ☞ 2008.12.31. 이전 취득분의 경우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도 특례 배제됨
    - ☞ 수도권 :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원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 ㉢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 ☞ 2021.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변경 전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 ㉤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
- ② 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2억(한옥은 4억) 이하일 것
- ③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면 지역(또는 연결한 읍·면 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것

#### 해석사례 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9(2022.08.25.)

-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취득 후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등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입니다.

9

##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한지?

◎ A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아름씨는 '21.7월 B일반주택을 취득함

- 이아름씨는 '24.5월 B일반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A농어촌주택 :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으로 감면요건을 충족한 주택임

Q.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고 하던데

- 제 경우 B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A.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A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B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B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

주택 취득유형	비과세 가능 여부
① 先 일반주택 + 後 농어촌주택	비과세 가능
② 先 농어촌주택 + 後 일반주택	비과세 불가능

### 해석사례 1. 서면-2022-부동산-0828(2022.04.06.)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던 농어촌주택 부수토지에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그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해석사례 2. 서면-2021-부동산-6220(2022.09.14.)

●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일시적2주택 중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3.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71(2016.12.22.)**

- 국내에 1주택(이하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2개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현행 : 2022년 12월 31일까지

10

### 일반주택과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 정민국씨는 A감면주택과 B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정민국씨는 '24.12월 A감면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A감면주택 : 조특법§99의2에 따른 신축주택으로 감면요건을 충족한 주택임

Q. A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B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된다고 하던데

- 제 경우 A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나요?

A. A감면주택과 B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B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에는 A감면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나

- A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A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감면금액 계산방법은 다음 페이지 참고

#### 조특법§99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

- ① 감면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 감면주택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100% 세액 감면

- ② 감면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

- 감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begin{array}{rcl} \text{양도소득금액} & & \\ (\text{소득법}\S 95\text{①}) & \times & \frac{\text{신축주택 취득일부터} \\ & & \text{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text{양도당시 기준시가}} \quad - \quad \frac{\text{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text{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end{array}$$

### 계산사례

- ① 양도가액 : 15억원 ② 취득가액 : 5억원 ③ 양도소득금액 10억원
- 기준시가 : ① 감면주택 취득당시 : 2억원 ② 감면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 3억원  
③ 감면주택 양도당시 : 7억원

$$10\text{억원}(15\text{억원}-5\text{억원}) \times \frac{3\text{억원}}{7\text{억원}} - \frac{2\text{억원}}{2\text{억원}} = 2\text{억원}$$

### 해석사례 1.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38(2019.05.31.)

-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해석사례 2.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267(2020.11.20.)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1항의 방법에 따라 감면 대상주택임을 확인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제8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만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2)

구 분		내 용
감면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4.1.~'13.12.31. 기간 내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주택으로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li> </ul>
감 면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이내 양도 ⇒ 100% 감면</li> <li>· 5년 경과 양도 ⇒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li> </ul>
대 상 주 택	신축주택 취득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4.1.~'13.12.31.( '13.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한 경우 포함)</li> </ul>
	자가건설주택, 조합원의 재개발·재건축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3.31. 현재 미분양 주택</li> <li>· 신축주택</li> <li>· 30호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등</li> <li>· 1세대 1주택자의 주택</li> </ul>



	주택건설 사업자로부터 취득주택	
	감면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 85㎡를 초과</li> <li>• '13.3.31.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 '13.4.1. 이후 해제</li> <li>• 위 해제한 자 또는 그 자의 배우자 등이 해당 주택을 '13.4.1.~ '13.12.31. 취득</li> <li>• 취득 후 61일~양도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오피스텔 (임대주택인 경우 60일 이내 임대주택 미등록)</li> </ul>
	적용시기	'13.5.10.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위 내용을 적용시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령, 해석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0월 21일(금)	10월 24일(월)	10월 25일(화)	10월 26일(수)
미 달 러 (USD)	1431.70	1436.60	1436.60	1436.50
일 본 엔 (JPY)	953.42	962.03	965.39	969.92
영 국 파 운 드 (GBP)	1607.23	1625.73	1624.79	1645.51
캐 나 다 달 러 (CAD)	1039.20	1052.22	1049.11	1054.08
홍 콩 달 러 (HKD)	182.41	183.02	183.01	183.00
위 안 화 (CNH)	197.35	197.77	197.86	195.58
유 로 화 (EUR)	1400.20	1414.05	1420.08	1430.90
호 주 달 러 (AUD)	898.11	914.47	909.15	915.91
싱 가 폴 달 러 (SGD)	1004.95	1013.47	1010.73	1013.58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02.75	303.21	303.21	303.35

#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마련

- 금융감독원, 2022. 10

- 그동안 사후적으로만 공시되었던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지분거래가 ‘사전’에도 공시되도록 하겠습니다.
  -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는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거래(매도 또는 매수)하려는 경우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매매예정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미공시·허위공시·거래계획 미이행 등의 경우,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 사전공시제 도입을 통해 내부자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장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동 방안은 시장의 관심이 큰 국정과제인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금년 내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신속히 제도화하겠습니다.

## I

### 추진배경

- 그동안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투자자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 \* (예)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즉시 매도하여 주가 하락 초래
  - 일부 일반투자자들은 기업의 미공개정보 접근이 용이한 내부자들이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주가 하락 등 피해는 일반투자자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금융위는 금년 3월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일반 주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장 후 6개월간 매도를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일반투자자 보호조치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동 조치만으로는 내부자가 상장 후 보호예수기간(6개월) 이후 보유한 주식의 처분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고,
-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의 주식거래에 대해 일반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한편, 미국의 경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예방,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내부자의 주식거래시 사전거래계획 제출제도를 운영중이며,
- 최근에는 동 제도를 강화하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 (현황) 美 SEC는 내부자가 '매매계획'을 사전에 수립제출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관련 제재를 면제 (< 당사자 항변사유로 활용)
- ▶ (개선 추진중) 매매계획 제출시점과 실제 매매시점 사이에 상당기간(120일 이상)을 두어야 유효한 계획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제도남용 방지노력 中

⇒ 정부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켰고, 그동안 연구용역, 간담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 '22.5~7월, 내부자거래 규율방안 관련 연구용역 (서울대 산학협력단)
- ▶ '22.6.17일,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 (금융위 부위원장 참석)
- ▶ '22.7.26일,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 II 현황 및 문제점

- 미공개정보이용 불공정거래 현황
- 최근 5년간('17~'21)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 총 274건을 분석한 결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11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17~'21)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현황 〉

위반행위	3대			시장질서 교란	합계
	미공개정보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건수(개)	119	64	81	10	274
비중(%)	43.4	23.4	29.6	3.6	100.0

※ 동일 사건에 복수의 유형 중복 시,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시장질서교란 順 분류

□ 내부자거래 관련 규제 현황

-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①직접규제(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와 ②사후적 규제를 병행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기본적으로는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제도를 통해 내부정보를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합니다.
- ② 그 외에도, 단기매매차익 반환<sup>❶</sup>, 사후공시<sup>❷</sup> 등을 통해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❶ (단기매매차익 반환) 임직원, 주요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하여 차익을 얻은 경우 그 차익을 해당 법인에 반환

❷ (사후공시) 임원, 주요주주의 주식 소유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5영업일 내 공시  
( >임원등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제도)

□ 그러나, 현재 임원, 주요주주 등 주요 내부자의 거래를 ‘사전적·예방적’으로 규율·감시하는 제도는 없는 상황입니다.

- 사후적 공시·제재만으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 내부자의 불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고,
-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의 지분변동에 대한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 대응 방안

### 가. 기본방향

- 현행 사후공시 체계를 ‘사전 + 사후공시’ 체계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
- ⇒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는 당해 회사 주식의 매매계획을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사전공시

### 나. 세부 도입방안

- [사전공시]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지분거래 계획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합니다.
- (공시의무자) 상장회사 임원<sup>❶</sup>과 주요주주<sup>❷</sup> (사후공시제도와 동일)
  - \* ① 이사·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
  - ②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 (공시대상)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 그 매매계획을 공시합니다.
  - \* 지분증권(우선주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권예약증권 등 포함
  - ※ 매매예정일 기준 과거 1년간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판단 (조개기 매매 등 규제회피 방지)
- (공시내용) 매매목적, 매매예정 가격·수량, 매매예정기간 등 거래(매수 또는 매도)계획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 \* 시장상황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추후 실제 매매가격·수량 및 매매일에 대해서는 일부 탄력성 부여

#### 〈 사전공시 포함 내용(예시) 〉

- ▶ (가격) 매매기간 중 시가수준(전일종가 대비 최대  $\pm 5\%$ )에서 매매 가능
- ▶ (수량) 목표수량을 공시하되, 목표수량 대비 일정범위(최대  $\pm 30\%$ ) 안에서 거래 가능
- ▶ (매매예정기간) 거래가 특정일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매예정일 + 10영업일 이내'에만 거래를 완료하면 됨

- (공시기한) 공시의무자는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 30일간 거래 금지 효과)
- [적용 예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소지 및 시장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거래 등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의무를 면제합니다.
- (외부요인 등에 따른 거래) 외부요인에 따른 지분 변동, 성격상 사전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사후공시에는 포함)
    - \* (예) 상속, 주식 배당, 주식양수도 방식의 M&A 등
  - (변경·철회) 원칙적으로 변경·철회는 금지되며, 법령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 \* (예) 사망, 해산, 파산, 부도발생,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 ※ 세부 예외사유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
- [실효성 확보] 사전공시 의무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 (감독) 공시의무자는 금감원에 매매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매매 후 사후공시 내용 확인 등을 통해 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 (제재)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의 경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실효적인 이행수단을 마련하겠습니다.

## IV 기대효과

-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장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미공개정보이용 예방) 내부자 주식거래의 정보투명성을 강화하여 미공개정보이용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시장변동성 완화) 시장에서 예측가능한 적응기간(최소 30일)을 부여함으로써 일시적인 물량출회로 인한 시장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V 향후계획

- 시장의 관심이 큰 국정과제인 만큼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투자자보호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여타 국정과제도 구체방안을 심층 검토중이며,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9~10월)
  - 주식양수도 방식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10~11월)

### 참고 1 -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요약표

구분	현행 사후공시 (임원 등 소유상황 보고제도)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자	▶ 임원 & 주요주주	(左同)
대상증권	▶ 특정증권등	(左同)
기한 (냉각기간)	▶ 소유상황 변동일 기준 5영업일 이내	▶ 매매예정일 기준 최소 30일 전
소규모 거래 예외	▶ 변동수량 1천주 미만 & 취득·처분금액 1천만원 미만	▶ 거래수량 총발행주식 1% 미만 & 거래금액 50억원 미만
공시내용	▶ 매매, 그밖의 거래 (특정증권등의 소유현황)	▶ 매매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매매예정기간 등)



적용예외	-	▶ 외부요인(증여·상속 등)
변경·철회	-	▶ 제한적 허용 (회생·파산절차 개시 등 객관적 사유 要)
관리·감독	▶ 금감원 보고	(左同)
제재	▶ 형벌, 행정조치 등	▶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 참고 2 - 핵심 QA

### 1. 내부자의 지분매도가 사전공시되면 시장에 부정적 신호로 인식되어 오히려 시장변동성이 확대되는 것 아닌지?

- ☐ 사전공시 도입시, 내부자 거래가 사후공시를 통해 시장에 알려지는 경우보다는 시장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최소 30일간의 거래금지기간이 발생하여 시장 참여자들에게 적응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2. 공시일-매매예정일 간 최소 30일간의 거래금지 효과로 인해 주요주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닌지?

- ☐ 상장회사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증권시장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임
- ☐ 소규모 거래(총 발행주식수의 1% 미만 & 거래금액 50억원 미만), 외부요인에 따른 지분변동(상속, 주식배당 등) 등은 공시의무 면제  
→ 거래의 자유 침해 최소화 노력

### 3. 장외거래의 사전공시 의무로 인해 (주식양수도 방식의) M&A 저해 및 기관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노출 우려가 있는데?

-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예방하기 위한 도입취지상 원칙적으로 장외거래도 사전공시 대상이나,  
→ 장외거래 중 주식양수도 방식의 M&A, 연기금의 지분매매 등의 경우 사전공시 예외로 하는 것을 하위규정 마련시 검토

**4. 소규모 거래 예외요건(거래수량이 총 발행주식수의 1% 미만이고, 거래금액이 50억원 미만)이 너무 느슨하게 설정된 것 아닌지?**

- ☐ 사후공시와 달리 사전공시의 경우 30일간의 거래금지 효과가 발생하여 재산권 제약의 우려가 있는 만큼, 사후공시 제도의 적용 예외조건\*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
  - \* 거래수량이 1,000주 미만이고 거래금액이 1,000만원 미만
- 제도도입 초기인 만큼 향후 제도운영 경과를 보아가며 강화여부 검토
- ☐ 거래수량(총 발행주식수의 1%) 기준 외에 거래금액 기준(50억원)을 추가적으로 적용 → 대규모 상장사 임원이 지분매도하는 사례는 효과적으로 규율 가능
- ※ [참고] ○○○페이 사례의 경우 일부 임원이 발행주식의 0.17%(23만주, 약 470억원) 처분

**5. 美 SEC의 사전거래계획 제출제도와 마찬가지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행위에 대한 항변권(면책권)을 인정해주는 것인지?**

- ☐ 금번 도입방안은 증권시장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상장회사 내부자가 지분을 매매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려는 것임
- 동 도입방안에 따른 사전공시를 하였다고 해서 미국처럼 항변권(면책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님
- \* 미국은 미공개중요정보를 ‘보유’하면 ‘이용’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우리나라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여부의 입증이 필요

#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안내

- 금융감독원, 2022. 10

## 주요 내용

- ① 앞으로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前 지출이더라도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발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 ② 라이선스 매각이 포함된 기술이전 시, 계약의 부대조건이 모두 이행되지 않더라도 부대조건의 성격에 따라 라이선스 매각 수익을 우선 인식할 수 있습니다.
- ③ 동 감독지침에 따라 향후 감독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 다만, 감독지침은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존 해석이 아니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 1 추진 배경

- 국제회계기준(IFRS)은 원칙중심 회계기준으로, 거래 특성에 따른 판단과 추정이 개입되어 상황별로 다양한 회계처리가 가능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감리에 따른 사후적 징계 및 처벌에 대한 우려로 거래 고유 특성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아울러 제조업 중심의 現회계기준은 빠르게 발전하는 新산업(제약바이오 산업 등)의 거래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감독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新산업 회계처리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과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22.3.11.(금))
  - ⇒ 그 일환으로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구성·운영(‘22.4~6월)하였으며, 첫 번째 과제로 제약·바이오 산업의 감독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합니다.

\*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제약·바이오 기업의 실무자 등으로 구성

※ 참고 : 그 간의 회계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 및 가이드라인

- ①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8.9.19.)
- ② 新리시기준서 시행 前後 해운사·화주간 장기운송계약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9.4.23.)
- ③ 물적분할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19.12.16.)
- ④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19.12.24.)
- ⑤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20.1.22.)
- ⑥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감독지침 및 후속조치('21.1.8., '21.2.8.)
- ⑦ 제3자 지정 콜옵선부 전환사채 발행시, 콜옵선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22.5.4.)

## 2 감독지침의 주요 내용

☞ 구체적인 감독지침의 내용은 별첨 참조

### ① 임상 1상 개시 승인 前 지출 (개발비 자산화 가능 여부)

- (쟁점) 임상 1상 개시 승인 前의 개발 관련 先지출에 대한 자산화 가능 여부가 불분명\* 하였습니다.
- \* 감독지침('18.9월)을 통해, 원칙적으로 임상 1상 개시 승인 이후 개발 관련 지출은 자산화를 허용하였으나, 1상 개시 승인 前의 지출을 자산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이 있었음
- (안내) 임상 1상 개시 승인 前이라도 개발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임상 1상 개시 승인 前의 지출도 자산화가 가능합니다.

### ② 기술이전 시 수익인식 방법 (라이선스 아웃 관련 수익인식)

- (쟁점) 라이선스 매각과 그 밖의 부대조건(임상시험 용역 등)이 결합된 기술이전 시, 부대조건이 이행되기 전에 라이선스 매각분만 먼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 하였습니다.
- (안내) 특정 요건(①과 ②)\*을 모두 충족한다면, 라이선스 매각시점에 매각대가를 먼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 \* ① 임상시험 용역을 회사(licensor)뿐 아니라, 제3자도 기술적 문제없이 수행 가능하여,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 licensee이 임상시험 용역과 별도로 라이선스의 효익을 누릴 수 있음
- ② 임상시험 용역이 의약품의 효과 및 안전성 등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는 절차일 뿐 성분 자체에 대한 유의적인 변형을 가져오지 않음

### ③ 그 밖의 안내 (개발비 관련 기타사항 및 무형자산 매각손익 표시)

- ① 다른 국가에서의 추가 판매 승인(이미 특정 국가에서는 판매 중)을 위한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 → 해당 지출이 다른 국가의 추가 판매 승인을 위한 개발 활동에 투입된 것이라면 개발비로 자산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② 개발활동에 자사 보유 재고를 투입한 경우 해당 재고자산의 원가 → 무형자산 창출에 사용된 재고자산 등 재료원가도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준비하는데 필요한 직접 원가라면 개발비로 자산화 가능합니다.
- ③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된 매각손익의 손익계산서 표시 → 주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한다면 영업손익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 3 감독지침의 성격

- ☐ 감독지침은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니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 4 기대 효과

- ☐ 제약·바이오와 같은 新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계약의 특성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하던 관행을 벗어나, 거래의 고유 특성을 보다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5 향후 계획

- ☐ 동 지침에 따라 향후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 향후에도 회계기준의 해석·적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회계기준적용지원반(간사: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을 중심으로 감독지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 대폭 축소

- 고용노동부, 2022. 10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제4차 규제혁신 특별법」(반장: 권기섭 차관) 회의에서 연말까지 각종 신고·신청 제출 절차를 합리화하고, 진입 요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신청·제출 절차 등 합리화

### ❶ 사업주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대폭 줄여 간소화한다(12월).

고용센터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 임금, 매출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매출액 자료 등을 제출토록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별도로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대신, 공공기관의 자료(월평균 보수액, 조세 자료 등)를 활용해 장려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법령을 정비해 신청자의 서류 준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시범 시행 중(7월~)

### ❷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할 때, 변경 신고의 필요성이 낮으면 그 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12월).

현재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시작 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해야 하고, 그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없이 지방관서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 석면 해체·제거 작업신고서, 공사계약서 사본,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서, 석면 조사결과서 제출

그러나 작업 취소, 작업 물량 축소, 단순한 작업 기간 연장 등 변경 신고의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이를 면제해 석면 해체·제거업자의 변경 신고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❸ 현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야 하는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

입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는데, 이때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만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이 가능하여,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을 하는 경우에도 수탁 제조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해 왔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s Safety Data Sheet)란?〉

-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설명서로서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특성, 유해성·위험성 정보, 취급 방법 등 16가지 항목으로 구성

이에 따라 제조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 중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영업 비밀로 하고 싶은 경우, 수탁 제조자를 통해서만 공단에 영업 비밀을 신청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제조 위탁자는 영업 비밀 전체를 수탁 제조자와 공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제조 위탁자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영업 비밀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영업 비밀의 유출 우려 및 신청 지연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12월).

#### ④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장년고용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절차를 폐지한다(9월).

- \* 고용노동부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등을 고령자인재은행과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로 지정해 고령자 등에 대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

장년고용지원기관은 매년 반복해오던 고용노동부의 재지정 절차로 인해 중장기적인 인적·물적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다.

-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민간센터(19개소) 상담사 154명 중 66명(42.8%)이 기간제

이에 장년고용지원기관이 연속적으로 사업을 계획·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을 “지정된 날부터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를 폐지한 때” 까지로 개선하고, 재지정 절차에 따른 행정 부담도 줄여 관행적인 재지정 절차를 없애면서 평가 결과 3년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장년고용지원기관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②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진입 요건 등 개선

### ① 직업정보제공사업 등의 사업자가 사업자협회를 원활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인적·설립 요건을 개선한다(11월).

### 〈사업자협회 주요 역할〉

- ▶ 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훈련,
- ▶ 구직자 직업지도,
- ▶ 교육교재 및 홍보자료 발간,
- ▶ 전문 분야 사업컨설팅,
- ▶ 근로자 및 근로자를 소개받은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공제사업,
- ▶ 연구용역 등 위탁사업

「직업안정법 시행령」상 사업자협회를 설립하려면 사업자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3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 사업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30인 이상의 발기인” 규정으로 사업자협회 설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사업자협회가 활성화되면 직업정보제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원사와 협회 간 업무 공유 등을 통해 구직자에 대한 취업 지원 활성화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직업안정법령 준수, 불법 구인업체 근절 등 구직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②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입후보 요건도 개선한다(11월).

「근로자참여법 시행령」은 근로자위원회에 입후보할 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근로자의 자율적인 입후보를 제약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 ③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중 시설기준을 합리화한다(12월).

### 〈안전보건진단이란?〉

- ▶ 안전보건진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에게 지정받은 기관이 실시하는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인력·시설 및 장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안전보건진단이 주로 사업장에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사무 업무도 채택 또는 공유 사무실 등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력과 장비 등 안전보건진단의 품질과 관련된 요건은 유지하되, “사무실” 보유 요건은 제외할 예정이다.

\* 안전진단기관 시설기준: 사무실, 장비실

보건진단기관 시설기준: 작업환경상담실, 작업환경측정 준비 및 분석실험실

## ④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경영악화 여부를 평상시보다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을 개선한다(12월).

현재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 감소의 판단 기준이 직전 연도로 한정되어 있어 일부 자영업자 등은 장기간에 걸친 위기 상황이 소득 감소 판단 기준에 고려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22개의 규제개선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규제혁신 특별법」을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숨어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참 고

## 규제개선 추진과제

연 번	규 제 개 선 추 진 과 제	소관부서
1	고용장려금 지급요건 간소화 및 데이터 연계 (現) 고용장려금 신청 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매출액 자료 등 많은 자료 제출 (改) 공공기관 정보 연계해 제출서류 최소화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12월)	코로나19대응고용회 복지원반 조병돈 사무관 (044-202-7305)
2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신고서 변경 절차 개선 (現)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신고 후 작업 변경 시 모든 작업 변경 신고 (改) 작업 취소, 작업 물량 축소 등 변경 신고의 실익이 없는 경우 변경신고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12월)	산업안전기준과 황규석 사무관 (044-202-8871)
3	제조 위탁자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現)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작성·제출 (改) 제조 위탁자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영업 비밀의 심사 신청 가능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12월)	화학사고예방과 안유진 사무관 (044-202-8966)
4	장년고용지원기관 재지정 절차 폐지 (現) 매년 장년고용지원기관 재지정 (改) 재지정 절차 폐지, ‘지정된 날부터 지정이 취소되거나 폐업된 때’까지로 지정기간 규정 · 고령자 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고시) 개정(9월)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김영덕 사무관 (044-202-7395)
5	사업자협회 설립 요건 정비 (現) 사업자협회 설립 시 30인 이상의 발기인 필요 (改) ‘30인 이상의 발기인’ 규정 정비 ·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11월)	고용서비스정책과 이계승 사무관 (044-202-7333)

연번	규 제 개 선 추 진 과 제	소관부서
6	<p>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 요건 정비 (現)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 필요 (改) 근로자위원 입후보 요건 정비     •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개정(11월)</p>	<p>노사관계법제과 박수호 사무관 (044-202-7395)</p>
7	<p>안전보건진단기관 시설 기준 합리화 (現) 안전보건진단기관 지정 시 인력·시설·장비 요건 필요 (改) 시설 요건 중 ‘사무실’ 보유 요건 정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12월)</p>	<p>산업안전보건정책과 최성필 사무관 (044-202-8814)</p>
8	<p>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수급 자격 인정기준 합리화 (現)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 감소 여부 판단 (改) 소득 감소 기준 시점 합리화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12월)</p>	<p>고용보험기획과 이영기 서기관 (044-202-7352)</p>
	<p>자영업자 고용보험 수급 자격 인정기준 합리화 (現)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판단 (改) 매출 감소 기준 시점 합리화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12월)</p>	<p>전국민고용보험확대 TF 이현규 사무관 (044-202-7927)</p>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 요건 완화 등 규제 대폭 완화

- 고용노동부, 2022. 10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0월 14일(금),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제도 확대,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제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22년 11월 23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 < 주요 개정내용 >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주 용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사업주 용자제도 지원 대상을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용자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 (용자한도) 사업주당 1억원 → 1억5천만원,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 1천5백만원

이와 병행하여 코로나19 장기화, 최근 고물가 등 엄중한 민생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용자 상환 기간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 사업주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용자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한다.

\*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 '23년 정부 예산안도 전년(199억원) 대비 50.6% 증액(300억원) 편성하여 제출

그리고 보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에 대한 공인노무사 조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장 규모, 근로자 보수 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는 등 지원요건을 확대\*한다.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 → 30인 미만 사업장,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350만원) → 지원신청 근로자 본인 월평균 보수액(350만원)

박종필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고물가 등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실질적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라고 말하며,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주 용자제도 확대 등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http://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mois.go.kr](http://www.gwanbo.mois.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참 고 1

## 현행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용자 제도

□ 사업 개요 → 인포그래피 추가

-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용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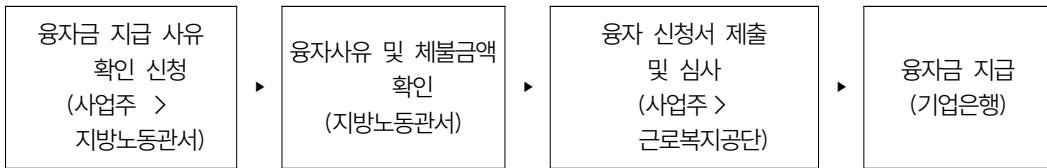
구분	지원 요건
사업주 요건	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 (시행규칙 제8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②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③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하 * 다만, 휴·폐업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업주 등은 용자 제외
근로자 요건	○ (재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퇴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사업주 용자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용자 조건

구분	용자 조건
용자금액	○ 사업주당 1억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만원 한도) * 용자금은 체불 근로자에게 직접 계좌로 입금
이자율	○ 담보 연 2.2%, 신용 연 3.7%
상환방법	○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상환 * 다만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의 경우 분할상환기간 1년 연장 가능



#### □ 사업추진체계



### 참 고 2

### 현행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제도

#### □ 사업 개요

-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지원

#### □ 조력지원 노무사 선임절차

- 대지급금 조력지원 국선노무사 모집 및 활용 계획 수립 → 지방관서별 모집 공고 → 응모 및 심사 → 선발 및 위촉장 수여

#### □ 지원 대상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이면서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이 350만원 이하인 도산 사업장에서 퇴직한 체불 근로자

#### □ 지원 내용

- 위촉된 공인노무사가 지원활동이 종료된 이후 지방관서에 비용청구하면 규정에 따른 금액을 공인노무사에게 지급
  - 도산인정 90만원 등 (사업장당)
  - 대지급금 사실확인 및 지급 시 6만원 (근로자 1인당)
  - 1개 사업장당 300만원 한도

#### □ (지원절차)

